

외국인 근로자 잇단 사고사...통곡의 코리안 드림

이역만리서 악착같이 일하다 참변...광주·전남 3년동안 14명 숨져
수천만원 이송비용에 시신 인도 포기...체계적 지원 시스템도 없어

베트남인 전 디엔퐁(39)씨는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한국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 남겨진 아내와 어린 다섯 아이들이 눈에 밟혔지만, 일급 식구를 부양하기 힘들었던 그는 고민 끝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신안 등지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6개월만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몸이 빨려 들어간 것이다.

편씨가 겪은 6개월간의 한국생활도 비참했다. 그는 선원생활로 받은 150만원 안팎의 임금을 통째로 가족에게 송금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았던 그는 선주가 제공해 주는 숙식만으로 생활했고, 휴일에도 외출은커녕 다른 일지리를 찾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만 했다고 한다.

한 동료 선원은 "(편씨) 입버릇처럼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단 100원도 쓸 수 없다고 말해왔다"면서 "근면 성실하고, 시간만 나면 가족 사진만 볼 정도로 가족 밖에 몰랐던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통역을 통해 그의 아내에게 사망소식을 전했다"며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대사관은 전 디엔퐁의 시신

인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재해 처리 등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엔 담양의 한 수로관 생산공장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스무 살 청년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하피 유리엔토씨는 지난 5월 1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장 안에서 거푸집 기밀질, 청소 등 잡일을 도맡았다.

공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하피씨는 성실한 직원이었으며, 200만원 가량 받는 월급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다. 3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금의환향' 하는 게 목표였던 그의 꿈은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사관을 통해 유족과 힘들게 연락이 닿았지만, 유족이 시신 인도를 포기했다"면서 "결국 가족 한명 없이 화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안고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죽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시신 인도 비용 등 때문에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21만 8581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해 있

며, 광주·전남에는 각각 3104명, 1만342명이 근로중이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전남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14명으로 2~3개월에 한 명씩 사망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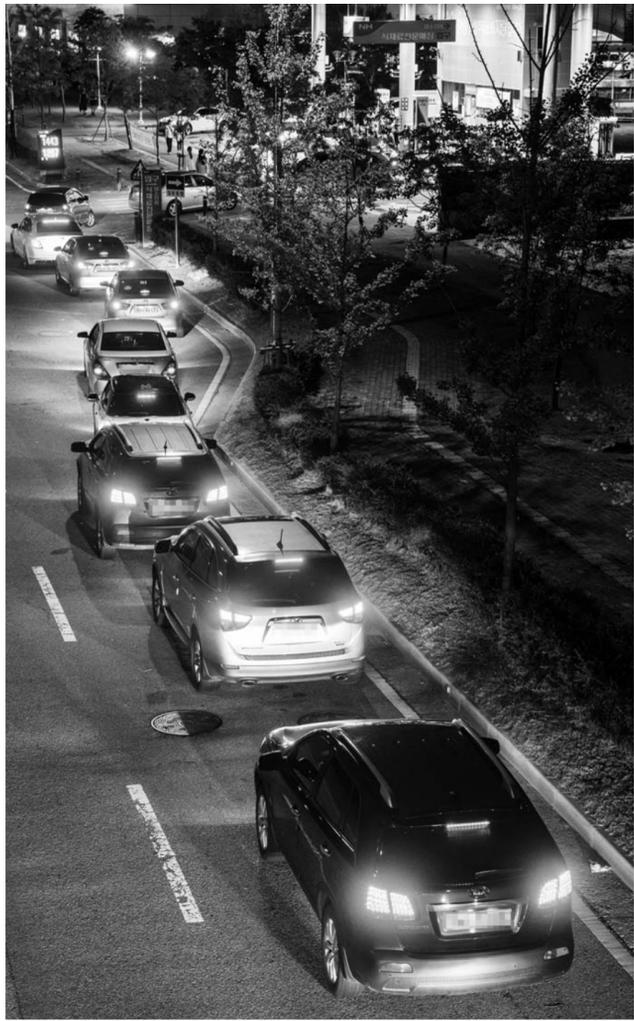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승선 후에도 가족 한명 없이 화장 처리되는 등 또 한번 비참한 처지에 노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사망하면 자국 대사관이 유족에게 연락을 해 입국을 요청하거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 등으로 유족 위임장을 받는다. 이후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를 외교통상부에서 확인 받고, 사망자 국적의 대사관으로부터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야 시신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유족들 중 대부분은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시신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대사관에게 모든 절차를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대사관에선 망자의 종교나 신념 등에 관계 없이 모두 화장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일부 국가나 종교의 경우 회장을 금기시 하고 있기도 하다.

홍관희(노무사) 광주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담당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전무한 상태"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한명 한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자국에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도와줄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름값 인상 앞두고 주유소 북적... 유류세 인하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밤 광주시 광산구 한 주유소 앞이 주유를 위해 몰려든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최현배 기자choi@

탄약 보급 군인, 5·18 헬기사격 증언한다

오늘 전두환 재판...조영대 신부 등 출석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에 대한 재판이 2일 오후 2시 광주지법(201호)에서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열린다. 이날 재판 방청 방식은 선착순이다.

재판에는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1980년 5월 육군 항공대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군인 최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1980년 5월 당시 출동하는 헬기에 탄약을 보급했고, 헬기가 돌아온 뒤 탄약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5월 당시 31항공단에서 탄약관리 하사로 근무한 최씨는 "갑작스런 출격 명령에 따라 20mm 전투용 고폭탄 2000발과 보통탄 1000발, 7.62mm 기관총용 탄 1000발을 헬기에 지급했다"며 "머칠 뒤 돌아온 헬기

에는 고폭탄만 그대로 있었고, 20mm 보통탄은 200발 정도, 7.62mm 기관총용 탄은 300발 정도 줄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또 "항공 사격을 해 탄피를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올렸고, 당시 이 서류에 장교들이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은 '무장은 했으나 사격은 없었다'던 헬기 조종사들의 기존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5·18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혀내는 뇌관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피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보이스피싱 대만인 검거 광주북부·동부경찰 공조

광주북부경찰은 1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7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대만 국적 A(32)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B씨(79) 집 대문 앞에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현금을 인출해 현금문 앞에 놓아야 안전하다"고 B씨를 속였으며, 이에 B씨가 현금을 인출해 대문 앞에 놓아두자 보이스피싱 조직 절취책임 A씨가 이를 갖고 전주로 달아났다.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주에 머물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은 동부경찰이 공요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붙잡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월호, 5·18 피해자들 '가짜뉴스 유포 변호사 징계하라'

대한변협에 진정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를 운영하는 김기수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지난 30일 진정서를 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한 흥덕씨와 5·18 당시 전남도청에 있었던 시민 경찰수씨 등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김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16연대는 "김씨는 변호사이자 언론사 대표 지위에 있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프리덤뉴스'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운영했다"며 "김씨의 악의적 행위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 따라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률 전문가가 세월호 참사·5·18과 관련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 마사지 업소서 일하던 불법체류 여성 에이즈 감염

여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1일 여수시와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40대 외국인 여성이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동남아 여성인 A씨는 여수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다 최근 급성 폐렴 증세를 보여 순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의식불명상태까지 악화된 A씨는 정밀검사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언제부터 여수에 거주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태다.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국적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 보건소와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A씨가 에이즈에 걸린 경로 등을 정밀 추적 중이며, 과거 행적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부터 해당 업소에서 일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업주 등을 상대로 A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조국 불륜 의혹 주장 30대 벌금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 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제자 A씨와 친정 관계에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고, 공인이 아닌 여성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조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일반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화이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